

2023 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THE ECONOMIC
POLICY DIRECTIONS
SECOND HALF OF 2023

경제활력 제고

민생경제 안정

경제체질 개선

미래대비 기반 확충



대한민국정부

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Part1. 경제활력 제고

1 거시·금융관리 강화	05
2 수출·투자 촉진	06
3 지역경제 활력 제고	08
4 내수 활성화	09

Part2. 민생경제 안정

1 물가·생계비 부담 경감	10
2 주거 안정	11
3 일자리 확충	12
4 약자복지·취약계층 지원	13

Part3. 경제체질 개선

1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	14
2 구조개혁 가속화	15
3 경제·규제 혁신	16
4 공정·상생 촉진	17

Part4. 미래대비 기반 확충

1 저출산·고령화 대응	18
2 국제연대·경제안보 강화	19
3 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	20

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
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

‘경제활력 제고’ + ‘민생경제 안정’ + ‘경제체질 개선’ 등
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“미래대비 기반 확충” 등 중장기 과제 추진

이를 통해 ‘자유시장경제’ 복원 및 ‘글로벌 선도국가’ 도약 기반 마련

자유시장경제 복원

+

글로벌 선도국가 도약



경제활력 제고

⋮

- 거시·금융관리 강화
- 수출·투자 촉진
- 지역경제 활력 제고
- 내수 활성화



민생경제 안정

⋮

- 물가·생계비 부담 경감
- 주거 안정
- 일자리 확충
- 약자복지·취약계층 지원



경제체질 개선

⋮

-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
- 3대 구조개혁 가속화
- 경제·규제 혁신
- 공정·상생 촉진



미래대비 기반 확충

- 저출산·고령화 대응
- 국제연대·경제안보 강화
- 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

01 거시·금융관리 강화

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

차질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·공공기관 등 15조원+α 추가자원 투입



중앙·지방

- ▶ 세계잉여금·기금 등 여유자원 최대한 활용
- ▶ 낙찰차액 SOC 재투자 등 집행여력 보완
- ▶ 국가계약 한시 특례 연장(~'23.12월)
- ▶ 지방 순세계잉여금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활용



공공기관·정책금융

- ▶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당겨집행 적극 유도 등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집행
- ▶ 정책금융은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 공급

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·외환시장 안정 유도



자금·채권시장

- ▶ 국고채 발행 상반기 대비 30조원 수준 대폭 축소, 한전채 발행 상반기 대비 1/3 이하로 축소, 장기채 시장 활성화 노력 병행
- ▶ 공공기관·금융회사·대기업 퇴직연금(DB형)의 만기분산 등 추진



금융·외환시장

- ▶ 다자간매매채결회사 인가 추진, 세계국채지수(WGBI) 신속 편입 추진
- ▶ 외평채 발행(하반기 중 27억불 한도) 한·일 간 100억불 달러화 통화스왑 체결

5

가계부채·부동산PF·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



가계부채

- ▶ 양적 관리,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질적개선
- ▶ 연체 위기자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
- ▶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



부동산 PF

- ▶ PF 펀드,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·정상화
- ▶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상향(80 → 90%)
- ▶ 건설사 회사채 발행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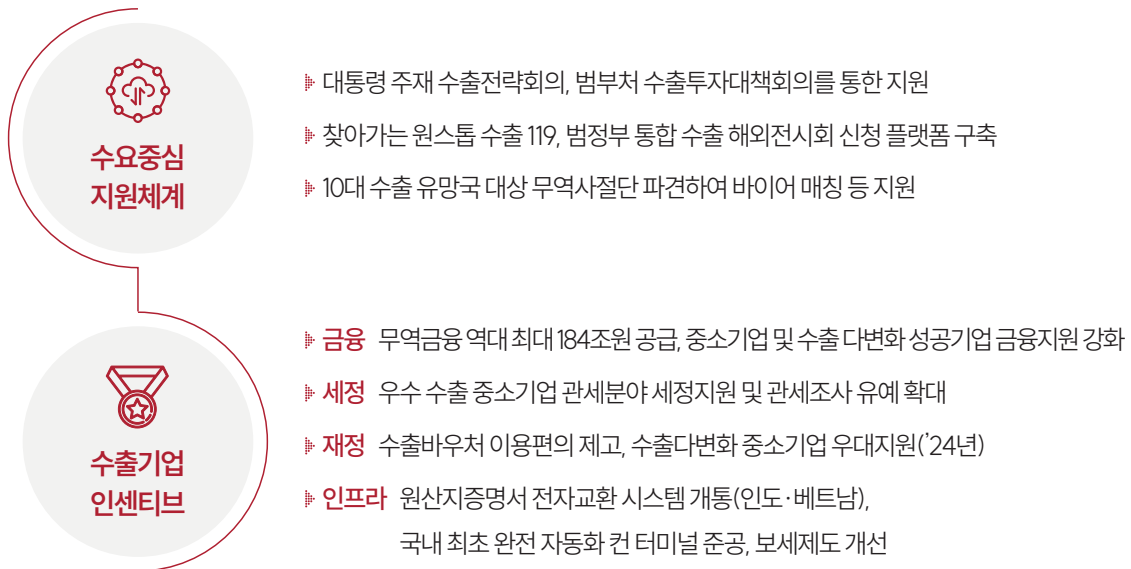
금융기관·한계기업

- ▶ 디지털 뱅크런 대응을 위한 한은 대출제도 개편 등 검토
- ▶ 기간기금 운용기한('25년 말), 지원 목적·업종 등 전면 재검토
- ▶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종과세 해소 등을 통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집행 지원

02 수출·투자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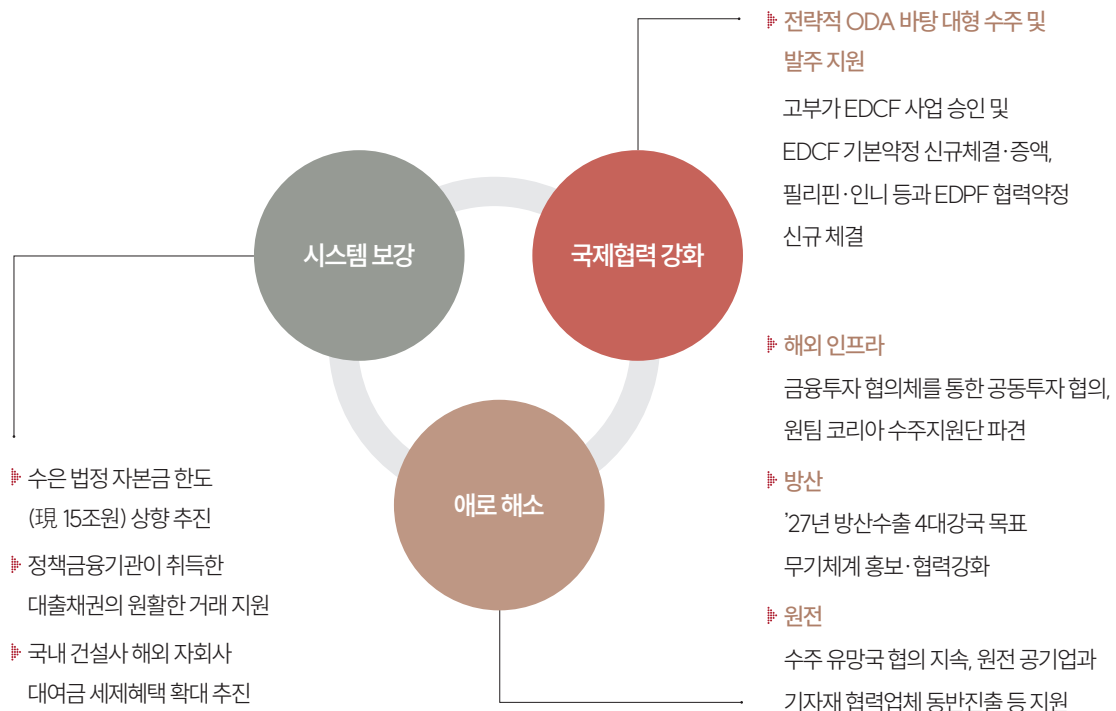
수출·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

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



6

2023년 350억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 추진



I 금융·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



투자기반 확충

- ▶ **금융**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공급, 대출한도 상향 등 공급 가속화
- ▶ **세제**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(협·단체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등)
- ▶ **관세**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 추진



외투

- ▶ 국가 최고위급 투자유치 행사(**가칭** Invest Korea Summit) 개최
- ▶ 외투기업 현금지원 규모 확대
- ▶ 외투기업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,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('23년 말) 연장



유턴

- ▶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해서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 강화
- ▶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 유연화



사업재편

- ▶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확대하고, 상시법 전환 추진
 - **대상** 공급망 대응 추가, 신산업에 소부장 포함
 - **지원** 간이합병 허용범위 확대 [존속회사의 소멸회사 보유지분: 80/100 → 2/3 이상, 지주회사 규제유예 특례기간(現 3년) 연장]
 - **관리** 사업재편 컨설팅 확대, 이행평가 후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



민자

- ▶ 사업절차 및 규제·제도 개선으로 사업 신속추진 유도
- ▶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('23년 말) 연장
- ▶ 신용보증 한도(0.7 → 1조원) 및 규모(2.3 → 3.0조원 목표)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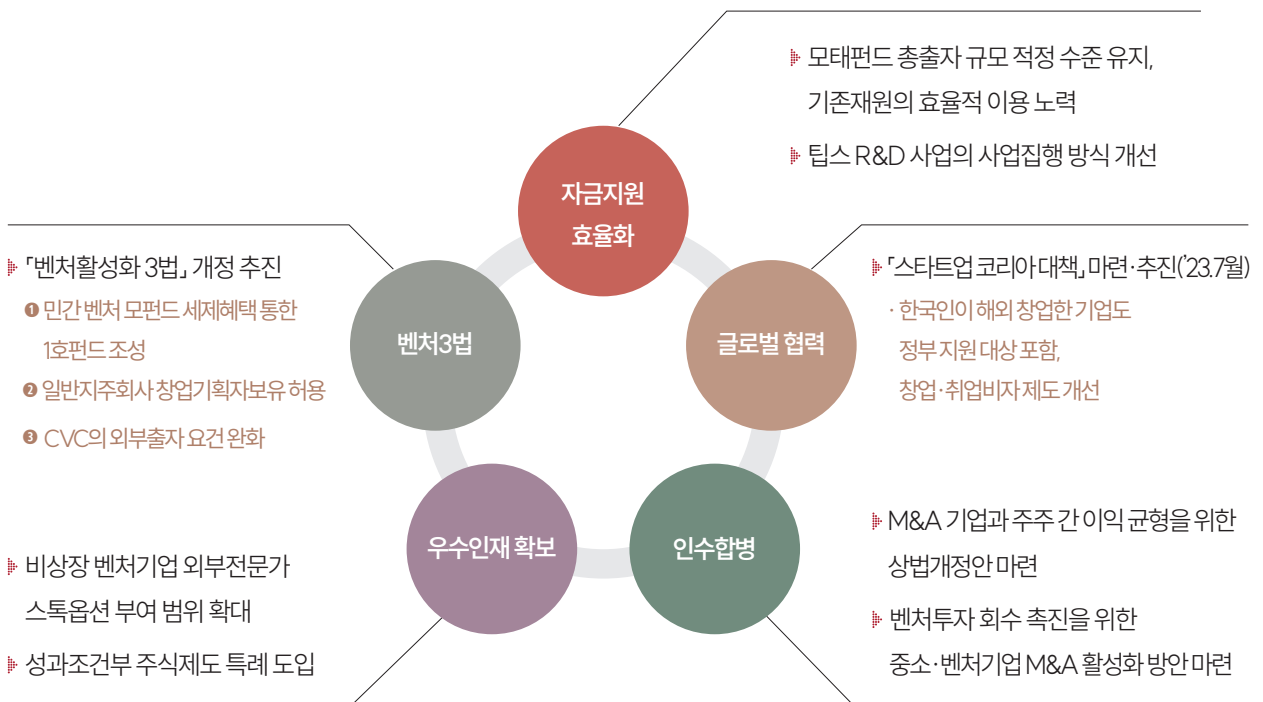


가업승계

- ▶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(5 → 20년), 특례 저율과세(10%) 구간 상향(60 → 300억원)
- ▶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관(5년)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'중분류' → '대분류' 내로 확대

7

I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 제고



03 지역경제 활력 제고




❶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, ❷ 기회발전특구 지원, ❸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

I ❶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

- ▶ 범부처 TF(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) 신설
- ▶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인센티브 강화

재정	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·토지매입 보조율 상향* *대·중견·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+1%p,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+5%p
금융	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 마련('23.8월)
부담금	비수도권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('23.8월 시행령 개정, ~'24년 말)
세제	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(최대 20%) 일몰 연장 추진('23년 말 → '26년 말)

- ▶ 공사비 증가·분쟁 등 사업추진 과정의 어려움 해소

 공공 ❶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 ❷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	 민자 ❶ 총사업비 변경 요건 구제화 ❷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('23.3분기)	 주택정비 ❶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 예방 ❷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
--	---	---

8 I ❷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

- ▶ 시·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
- ▶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

재정	균특회계 자율계정 확대,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* *(現) 투자금액의 3~50% 지원 → (改)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+5%p 확대
부담금	개발부담금 100% 감면
세제	이전·창업 기업의 국세·지방세 부담 완화
금융	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 추진,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세제혜택 제공
규제	규제특례 3종 세트(신속확인·실증특례·임시허가) 적용,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 검토

- ▶ 초·중·고 설립 지원,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으로 특구내 정주여건 개선

I ❸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

- 입주업종 확대**
 - ▶ 新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
 - ▶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·융합하여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*까지 확대
*예: 법률·회계·금융, 자동차 정비업 등
 - ▶ 산단 조성 완료 후에도 원활한 입주업종 변경·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 재검토 규정 신설
- 융복합 촉진**
 - ▶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「업종특례지구」 활성화
* ❶ 업종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추가, ❷ 신기술사업금융업,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
금지 업종에서 제외, ❸ 토지소유자 동의요건, 최소 면적기준 등 신청요건 완화
- 민간자본 활용**
 - ▶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산단 매매·임대 제도 개편 검토
- 정주여건 개선**
 - ▶ 편의시설이 포함되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

04 내수 활성화

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,
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등 추진

I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



동행축제

▶ 9월 중 동행축제 개최, 대형마트·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 병행 추진



코리아

세일페스타

▶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 연장(15 → 20일) 및 행사혜택 확대

*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, EMS배송료 할인,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한시유예 등 추진

I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

국내관광 지원

- ▶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·SRT 할인 제공(11월), 특화도시 경유 철도상품 및 도시 순환 셔틀버스 확대 운영
- ▶ 여행비수기인 11월경 숙박(3만원) 쿠폰 약 30만장 지원
- ▶ 디지털 관광주민증(한국관광공사) 대상지역 확대 및 혜택 강화
- ▶ 매월 마지막 주 「여행이 있는 주말」에 단기 지역 여행프로그램 운영('23.8월~)

관광수요 확충

- ▶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, 의견 수렴 거쳐 연내 제도화 방안 마련
* (現) 서울 → (改) 서울 + 부산(국제관광거점도시) 등
- ▶ 반려동물 동반 관광수요에 대한 맞춤형 관광상품 출시
*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에게 지역소비 상품권 제공 이벤트(당당쇼핑왕, 7월~) 운영 등

I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강화



방한 촉진

- ▶ 한국 재방문 유도를 위한 항공권 증정 행사 진행 (약 700장, '23.7~8월)
- ▶ 72시간 이내 K-스탑오버 관광상품 출시
- ▶ 경복궁·창덕궁 야간관람 외국어 해설 재개·확대
- ▶ K-로드쇼(뉴욕, LA 등), K-POP·K-푸드 이벤트 등* 개최
* 잼버리 K-POP 콘서트('23.8월), INK 콘서트('23.9월), 한돈데이 행사('23.10월), 우리술 대축제('23.11월)



편의 제고

- ▶ 해외 호출앱·관광앱을 활용하여 국내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
- ▶ 해외카드를 통한 자동 결제 지원
- ▶ 철도·고속버스 해외 예약 및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

01 물가·생계비 부담 경감

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,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·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

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품목 가격안정 노력 지속



에너지

- ▶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재시행('23.7~8월)
- ▶ 휘발유·경유·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(~'23.8월),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(~'23.12월)



공공요금

- ▶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·최소화하여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 자제
- ▶ 균특회계·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 자제 유도



식품·외식

- ▶ 영세 개인음식점(연매출 4억원 이하)에 대한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공제를 확대* 조치 일몰 연장 추진 *공제를 확대(8/108 → 9/109) 혜택을 '23년 말까지 적용
- ▶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,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 지속('24년)
- ▶ 중기·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('23년 한시)
- ▶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격 공개 확대(80개 → 10개 내외 추가) 및 가격급등 품목 점검 강화



농축수산물

- ▶ 기상 악화 및 가격 급등락에 대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 및 계약재배 추진
- ▶ 가격 강세·공급 부족 예상 품목 대상 할당관세·TRQ 등 관세 인하
- ▶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, PB상품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
- ▶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품목(감자 등)의 수입국 다변화

Ⅰ 에너지·의료·교육·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



에너지

- ▶ 전기·가스 요금 '에너지 캐시백' 지원 지속 확대



의료비

- ▶ 국민부담, 건보 재정여건,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'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검토('23.8월 건강심 결정)
- ▶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(▲5% 내외) 추진('23.12월 건강심 결정)



교통·통신비

- ▶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('23.8월)
- ▶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 개선,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 출시('23.7월)
- ▶ 개인별 이용패턴 바탕의 요금제 추천 등 통신사 등의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마련



교육비

- ▶ 공정 수능·입시체제 구축,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 집중 추진
- ▶ '23년 2학기 대학학자금 대출금리 동결(1.7%), 저소득층 대상 「대학생 패키지」 마련
- ▶ 중·고등학교 교복·생활복 구입 부담 경감,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



금융

- ▶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을 1조원 이상 확대, 온라인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강화
- ▶ 소액생계비 대출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(당초:1,000억원 → 확대: 1,500억원)

02 주거 안정

역전세·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

역전세,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



대출규제 완화

- ▶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
 - * (임대사업자) 대출 RTI 하향(1.25~1.5 → 1.0배)
 - * (개인) DSR 40% 대신 DTI 60% 적용

임대보증·책임증거

- ▶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 개선
(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유예기간 부여)
- ▶ 공인중개사가 매물·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·설명하도록 제도 개선

금융지원

- ▶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* (대환대출) 5대은행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 가동('23.7월)
 - * (무이자대출)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 지원

임대차 3법 합리화

- ▶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, 계약갱신요구권,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

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·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



주거비 부담완화

- ▶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전년수준(60%) 유지
- ▶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
- ▶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('23년 말 → '24년 말)

주거지원

- ▶ 디딤돌·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·전세자금 23조원 추가공급('23년 21 → 44조원)
- ▶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(240 → 300만원)
- ▶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·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
 - * (현행) 연 6천만원(전세), 7천만원(구입)
 - 연 7.5천만원(전세), 8.5천만원(구입)

임대주택·신규택지 공급·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



임대공급 활성화

- ▶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
 - * (공공임대) 토지소유자 무관 합산배제
 - (민간임대) 공공주택사업자 토지소유시 배제
- ▶ 공공임대주택 연내 10.7만호 공급,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.8만호 입주자 모집·입주

정비사업 촉진

- ▶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조속 입법
- ▶ 정비사업 시행·운영에 신탁사 특례 허용 → 기존 조합방식 대비 2~3년 단축
- ▶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,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

신규택지 공급 가속화

- ▶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추진
 - * 화성진안택지지구 지정, 과천과천지구계획 승인 등
- ▶ '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 발표

분양 확대

- ▶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실거주 의무 폐지 조속히 추진
- ▶ 우수입지 청년·무주택자 공공분양주택 7.6만호 인허가 및 사전청약 확대 추진(연내 수도권 3회 1만호)

03 일자리 확충

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

노동시장의 수요-공급 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

미스매치 해소

- ▶ 제2차 빈일자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업종 확대*
 - * [기존] 제조업, 물류운송, 농업, 음식점업, 해외건설업, 보건복지업
 - [추가] 건설업, 수산업, 해운업, 자원순환업
- ▶ 직업계·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제공('24년)

직업훈련 강화

- ▶ 직업훈련 고도화를 위한 「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」 수립
- ▶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확충
- ▶ 훈련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 내실화, 우수 직업훈련기관·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
 - *예) 베스트 직업훈련기관, 국가기간·전략산업훈련 우수과정 등 훈련비 우대지원 등

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



중장년·고령층

- ▶ 고용복지센터 내 경단년 등 중장년 전담 창구 운영,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 제공
- ▶ 고령자 고용법 개정, 「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」 마련



자영업자·특고

- ▶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 확대



청년의 일자리·주거 지원, 삶의 질 개선,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

일자리 지원

- ▶ 일경험 기회 지원('23년 8만명+α 목표) 및 '24년 지원 규모 확대 추진
- ▶ 단기복무 군간부 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 허용 추진
 - 중 소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('23년) 연장·대상 확대
 -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 추진('23년 말 → '25년 말), 한국어능력시험 등 어학시험 인정기간 연장대상(최대 5년) 확대
 - 벤 처 스타트업 대상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 확대,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강화
 - 해 외 청년 해외 인턴십 및 교류 확대, 해외취업 지원 등 추진

주거 지원

- ▶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30만원까지 전액 지원
- ▶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
 - *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 비과세
- ▶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 확대

자산형성

- ▶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비과세 기준 소득요건 명확화
 - * (現) 직전연도 소득 → (改)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연도 소득 적용
- ▶ 청년저축 세제혜택 지속 제공
 - *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('23년) 연장
 - *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('23년) 연장

자립 지원

- ▶ 취약청년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 완화
 - * 현재 본인부담금 10% → 면제 (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)
- ▶ 자립 준비청년, 니트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

04 약자복지·취약계층 지원

건전재정 기조 下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,
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

저소득층·노인·장애인·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

저소득층

- ▶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등 보장성 강화
- ▶ 반지하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
(‘23년 하반기)

노인

- ▶ 의료-요양-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
- ▶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

장애인

- ▶ 「장애인 개인예산제」 시범사업 추진
- ▶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

아동

- ▶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강화
*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전수조사
- ▶ 어린이집 0세반 개설 지원, 단계적 보육료 인상

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



경영애로 해소

- ▶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를 통해
영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
- ▶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
부가세 공제 특례 일몰(‘23년) 연장



경쟁력 확충

- ▶ 해외결제사와 제로페이간 제휴 확대
* 알리페이 및 알리페이플러스 등 추가제휴
- ▶ 민간 클라우드 펀딩을 전통시장,
골목상권 단위에도 적용 추진

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



경쟁여건 조성 등 통해
사회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
*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



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
개선·고도화
* 공공요급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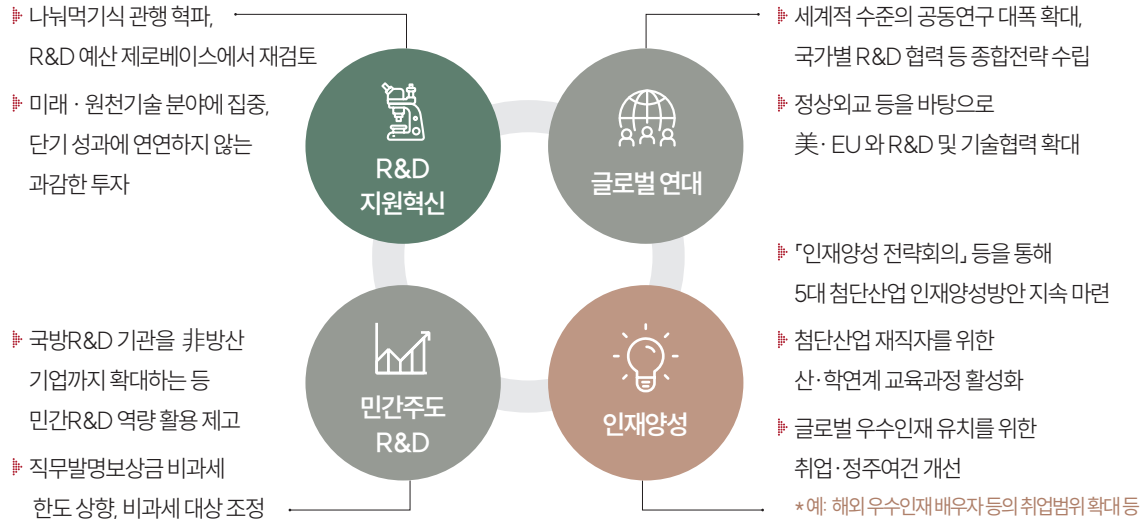


자활역량평가 개선,
민간일자리 연계 자활사업 확대
* 자활복지개발원-기업간 MOU 체결

01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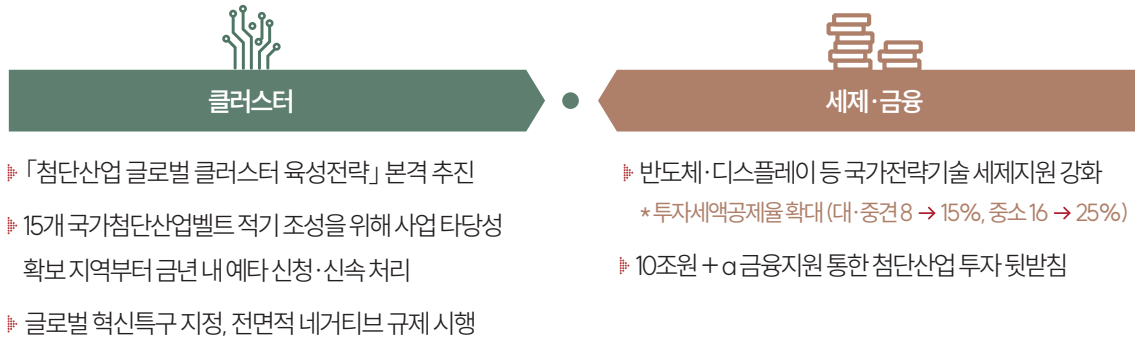
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강화

I R&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



14

I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, 금융지원(10조원+α)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



I 신성장 4.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성과 확산



02 구조개혁 가속화

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
노동·교육·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

Ⅰ 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·임금·이중구조 개편 구체화



노사법치

- ▶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·부당행위 엄정 대응
- ▶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



근로시간·임금

- ▶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, 현장 어려움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 마련
- ▶ 이중구조 개선방안('23.7월) 및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('23.4분기)



이중구조

- ▶ 특고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 마련
- ▶ 파견제도 선진화 추진



중대재해

- ▶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 및 지원방안 등 마련

Ⅰ 교육개혁 대학개혁, 국가책임 돌봄,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

대학

규제개혁·한계대학 정비·지역대학 혁신

규제혁신	▶ 학사·재정운영 관련 규제 재검토	▶ 유학생 비자유건 완화
한계대학	▶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	
지역대학	▶ 글로벌 대학을 선정(10개 내외)하여 5년간 약 1,000억원 지원	

재정·세제 등 정책적 지원 강화

재정	▶ 고등·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(現 9.7조원) 추진
세제	▶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시 해당 자산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 이연* * (現) 3년 거치 및 3년 분할임금 산입 → (改) 새로 취득한 수익용 자산 처분시까지

국가책임 교육·돌봄

유보통합	늘봄학교
▶ 교육부·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	▶ 시범사업 확대('23.3월 214교 → '23.하반기 약 300교)
▶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수립	▶ 운영체제·인력운용 제도화
▶ 어린이집 - 유치원 통합모델 시안 마련	▶ 국가·지자체 책무 등 근거 마련(늘봄학교지원특별법)

디지털 교육

- ▶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
- ▶ 「에듀테크 진흥방안」 등 후속조치 마련

Ⅰ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

국민연금	건강보험	고용·산재보험
▶ 「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」 수립('23.10월)	▶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개혁방안 마련	▶ 조세·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 마련
▶ 기금운용본부 역량·책임성 제고	→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('24~'28년) 반영	
▶ 출산·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	* 행위별 수가제 外 사후 보상,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 추진	

03 경제·규제 혁신

금융·서비스산업·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발굴·개선으로
우리경제 생산성 제고

I 서비스·공공·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 가속화

서비스



- ▶ 반려동물 · 펫푸드·펫보험 제도 정비, 제품 R&D 지원, 전문인력 육성
·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(100여개)의 동물병원 진료 부가세 면제 추진
- ▶ 콘텐츠·영화 ·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
· 중소·중견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제지원 추진
· 영화업계 정상화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 마련
*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 등

금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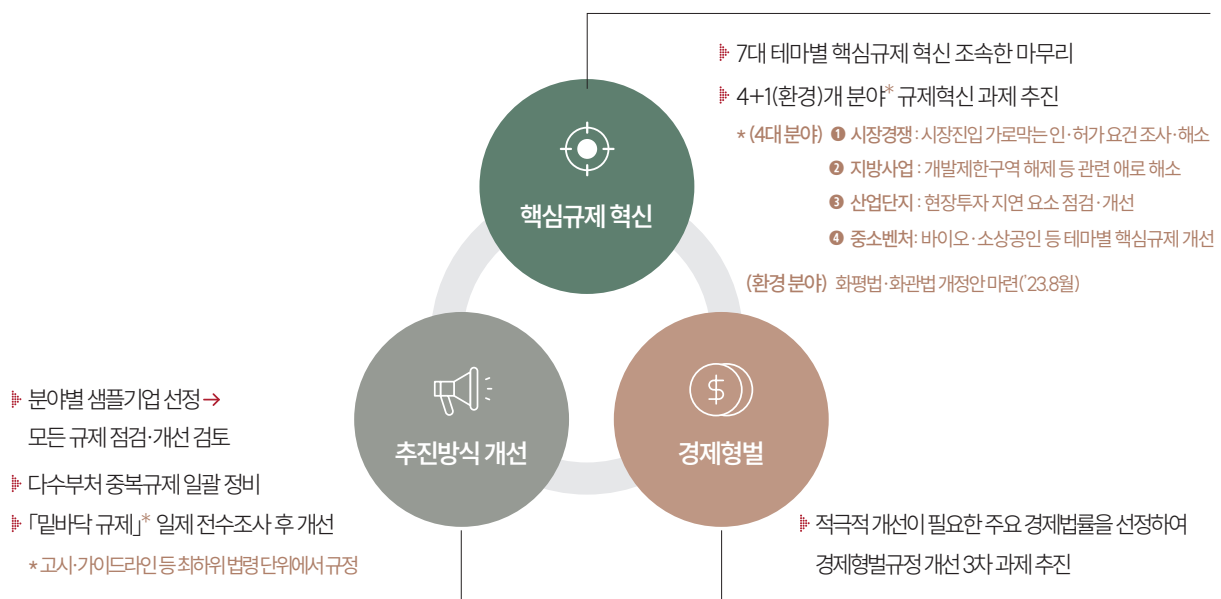
- ▶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 개선
* 맞춤형 지원 종합포털 「(가칭) 정책금융 알리오」 운영, 찾아가는 합동설명회 개최 등
- ▶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 지속 강구

공공



- ▶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및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
- ▶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·활용하는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 중점 추진
- ▶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공공데이터법·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

I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



04 공정·상생 촉진

경쟁 활성화, 불법·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,
상생·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

I 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 확립

통신



▶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 신규진입 활성화

※ 1년차 납부 부담 완화 → 이후 점증 분납

▶ 세부 개선사항 발표('23.7월)

은행



▶ 은행권 경쟁 촉진 관련 개선방안 발표('23.7월)

· 비이자수익 확대 등 수익구조 개선

· 미래 대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

금융거래

- ▶ 가상자산·증권시장 불법거래 근절
- ▶ 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 사전예방 등



노사·기업

- ▶ 불공정채용, 상습 임금체불 제재기반 강화
- ※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
- ▶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 강화*
- ※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자료송부요구권 명확한 내용 규정

경제 전반에
법에 근거한 공정한
시장경제 질서 확립

국고·공공

- ▶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·부정수급 점검 강화
- ▶ 공공조달 분야 경쟁제한 요소개선
- ▶ 역외탈세 엄정 대응



국민안전

- ▶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단속 인프라 확충 및 주요국과 국제공조 강화

I 상생인프라 조성,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



▶ 납품대금연동제 원활한 안착 위한 계도기간 운영*(10.4일~12.31일)

※ 계도기간 중에는 직권조사 미시행

▶ 대·中企, 선·후배 中企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위한 홍보·네트워킹 프로젝트 추진



▶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▶ 착한기부자 정부포상 승격·확대 등 혜택 강화

▶ 사회복지법인 결산서류 작성 부담 완화,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요구서식 축소·자동화



▶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관리위 확대, KDI「경제교육센터」검토

▶ 경제교육 콘텐츠 보강 및 「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」 구축('24년)

▶ 기업가정신 관련 신규 과목 편성, 창업친화대학 지원 강화

01 저출산·고령화 대응

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

I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

▶ 인구정책 4대 분야 중심*으로 주요 대책을* 순차적으로 마련

*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

* 「고령친화 주거지원대책」(‘23.3분기), 「농촌소멸 대응방안」(‘23.4분기),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」보완(‘23.4분기) 등

▶ 추진체계를 「인구정책기획단」*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 추진

* 기존 「인구위기대응TF(기재부 주관)」 및 「백세사회정책기획단(복지부·저고위 주관)」을 통합

I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

이민정책

▶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,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 마련(‘23.4분기)

비자제도

▶ 지역특화비자*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 지역 확대(‘23.4분기)

* 지자체 추천 외국인 및 지자체내 동포가족대상,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 先발급

인구감소지역

▶ 획기적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

· 정주조건(안) 비대면진료 제도화,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

· 투자유치(안) 토지이용규제 개선, 신규 법인설립 또는 투자시 혜택 부여 등

I 가사노동 및 육아·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

외국인 가사도우미	육아휴직	혼인	양육비용
시범사업 시행 → 확대 여부·보완방안 종합 검토(‘24년)	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* 및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*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(現 3개소) 확대	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	▶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(現:월 10만원) ▶ 자녀장려금 확대 ▶ 기업 양육지원금 세제혜택* 제공 * 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 마련

I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

사적 연금	실버타운
<p>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 확대</p> <p>▶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(現: 1,200만원)</p> <p>▶ 주택연금 가입범위(공시가 9 → 12억원) 및 월 지급금 상향</p>	<p>저소득층·중산층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 추진</p> <p>▶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기한(‘23년) 연장</p> <p>▶ 리츠 세제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 지원</p> <p>▶ 노인복지주택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</p> <p>▶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 관련 월세 세액공제 적용 검토</p>

02 국제연대·경제안보 강화

경제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·투자 등 실익 확보를 도모하고,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

I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

경제외교

정상외교 후속과제 추진

- ▶ (미)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 구체화 등
- ▶ (일) 한-일간 항공노선 회복 등
- ▶ (폴란드) 재무부 간 대화채널 개설 등

ODA

ODA 확대 목표* 조기 달성으로
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 제고 추진

* '19년 대비 '30년까지 2배 확대

- ▶ 아프리카, 중남미 지역과
공공·민간부문 교류 플랫폼 구축



FTA

신규 FTA 체결 및 후속·개선협상 등 적극 추진,
DEPA* 가입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 확대

*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:

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
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경제 협정 (현재 싱·뉴·칠 3개국)

19

I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대응체계 강화



거버넌스 강화

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 신속 추진, 고리스크 품목 중심 컨틴전시 플랜 마련

- ▶ 조기경보시스템(수입품목 → 수출품목 추가) 및
공급망 지도(소부장품목 등 추가) 고도화 추진
- ▶ 핵심광물 비축확대, 수입선 다변화, 해외생산기지 구축 지원 강화

인센티브 확충

수은 글로벌 공급망 자원 프로그램 적기 집행,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

- ▶ 핵심광물의 정·제련,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·R&D 시
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

03 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

에너지 사용 효율화, 원전생태계 복원,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·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

Ⅰ 에너지 사용 효율화,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 강화

에너지 절약

- ▶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·냉장고 문닫기 신규 지원, 도로조명 LED 전환 확대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유도
- **소상공인** 노후 냉방기 교체(1.9만대) 및 식품매장 냉장고 문닫기(1만대) 설치비용 지원 (소요비용의 40%) 신규 추진('23~'24년 한시)
- **중소기업**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 확대(300 → 500대)
- **공공부문** 전국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
- ▶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·R&D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 검토

원전생태계 복원

- ▶ 원전산업을 위한 금융·기술·인력 지원 등 지속
- **금 융** 원전관련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, R&D 등 저금리 대출, 해외 원전수주기업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
- **R&D** 원전산업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R&D 집중 투자
- **인 력** 대학·대학원 중심으로 원전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 지원

20

Ⅰ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

- ▶ 탄소중립포인트제* 사업 확대 및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 강화
- * 하반기 중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, 하반기 중 +8억원 확대
- ▶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 마련

Ⅰ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·추진



공공부문

- ▶ 정부·공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('23.12월)
- ▶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*·고도화하여 탄소중립 기술·제품 사업화 지원
- * 아이디어로(Idearo) 등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활용하여 발굴



기업·기술지원

- ▶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 확대 수립
- * (現)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→ (改) 태양광, 탄소중립 선박 등
- ▶ 주요 탄소 多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 마련 추진

